

“동서고속철도 추진 지금이 골든타임”

도와 도의회가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관철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내년이면 국회가 총선체제에 돌입하는 만큼 올해 내 사업을 확정하지 못하면 또다시 장기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1차 관건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2차 점검 회의다. 당초 16일에서 하루 앞당겨졌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의 핵심인 비용편익(B/C)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12일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재부 일각에서는 예타 작업

도 15일 예타 조사 2차 점검 회의 앞두고 도입장 반영 촉각
도의회도 오늘 기재부 방문 도민 기대감 등 민심·요구 건의

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을 흘려 사업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책적인 결정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구체적 결과가 논의돼야 한다는 점과 도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예타에 착수한 지 1년4개월 만에 1차 점검회의가 열렸지

만 경제성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오히려 비용 증가 부분만 언급해 도가 반발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2차 점검회의에서는 1편당 열차를 8량에서 6량으로 줄이는 내용의 비용 감소방안과 동해안 신규 수요 창출 문제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경우 평창동계올림픽과 맞물려 50만명에 달하는 신규 관광객수가 예

상되는 만큼 경제성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한국교통연구원이 실시한 대안노선 용역 결과, 비용편익(B/C)이 0.97로 나와 도민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김동일 도의회 부의장과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 박현창(새누리·평창), 유정선(새누리·비례) 의원 등 4명은 13일 기재부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재정관리국장을 만나 현재 진행중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도가 요구한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성현·윌선영기자

공공공사 최저가 대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공사수행능력·고용·공정성 평가
건설사간 저가경쟁 부작용 개선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신 건설사의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된 최저가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한 입찰공사에서 가장 낮은 공사비를 제출한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업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사간 저가 경쟁구도를 만들어 공사 과정에서 산업재해가 늘어나고 공사의 질이 낮아지는 등의 부작용이 더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년 초 도입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등 공사수행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까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입찰담합과 같은 부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의 일몰기한은 올해 말에서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위윤기자

기성금 3억2천만원 미지불 혐의
연수원 건립업체 전 대표 징역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안종화 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연수원 건립사업체 전 대표 최모(50·홍천군)씨에 대해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말 모 공사업체와 44억원 규모의 연수원 건립 공사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지난해 6월까지 3억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정삼 전 행정부지사 내정



강원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에 김정삼 전 행정부지사(사진)가 내정됐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12일 상임이사 공모에 참여한 2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했지만 김 전 부지사 외에 1명은 불참했다. 이에 따라 재단은 김 전 부지사를 단독으로 신임 상임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이성현기자 sunny@

원주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시 "10층 이상 대형건축물까지 적용 대상" 총공사비 30% 이상 지역 업체·자재 사용

원주지역 건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규모가 확대된다. 원주시는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를 대형 건축물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 확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남원주 역세권 개발, 1군지사 이전 등 각종 개발 호재에 따른 지역 경기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10층 이상 건축물이다.

원주시는 또 총 공사비의 30% 이상을 지역 전문건설업체 및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원주시는 착공 신고 전까지 대상 업체와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건축공사 지역업체 참여제의

시행은 내년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등지의 대형 건설사에 밀려 지역 전문 건설업체 및 자재 참여 비율이 저조한 상태"라며 "앞으로 지역 업체와 자재 참여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 지역 경기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정태욱 taef03@kado.net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김정삼 前 부지사 내정

강원인재육성재단 신입 상임이사에 김정삼(55·사진) 전 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2일 임원추천위원회회를 열어 상임이사 공모에 참여한 2명을 면접심사한 결과 김정삼 전 부지사만 참석, 상임이사 단독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 인사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백오인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막는다

건협, 신고센터 가동... 일반인도 참여 가능

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12일부터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신고센터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공사 발주자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설치됐다. 건협은 이를 통해 발주자의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달 발표한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은 이달 중순이면 대부분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시정이 완료된 것도 있고 나머지는 이달 중순이나 늦어도 이달 말까지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와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다만, 기준 개정 절차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일부 사안의 경우 연말까지 시행될 전망이다.

김정석기자 jskim@

“담합 적발땀 발주처에 일정액 손해배상” 계약서에 명시해야

내년부터 입찰 담합으로 적발될 경우 발주기관에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렇지 않아도 입찰 담합 건설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넣

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과잉·중복 처벌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이번 개정안에는 발주기관이 입찰 담합

으로 적발된 건설사에 대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입찰 담합을 하면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손해금액에 대한 입증 부담 없이 민사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박경남기자 knp@



공정위 제재와 중복처벌 ‘논란’ 정확한 손실액 가늠도 어려워

기획재정부는 발주기관의 입증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발주기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담합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금전적 제재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불

론 발주기관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담합 손실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입찰담합에 따른 과잉·중복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하면서 과잉·중복 처벌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우선 담합으로 인한 손실 정도 등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담합 행위에 따른 손실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사전에 손해배상액을 정해 놓는 것 자체가 행정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겉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뒤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만에 하나 입찰담합이 발생할 경우 미리 계약서에 명시한 손해배상액을 입증 책임 없이 물리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은 국가로부터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발주기관으로부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발주기관의 이중 처벌을 공식화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쉽게 받으려는 편의주의적 행정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내용은 어떤 게 있나

중심제 도입 근거... 혁신도시 지역의무공동도급 2년 연장

정부가 13일 입법예고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입찰담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근거는 물론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내년 종합심사낙찰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와 낙찰자 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이 담겼다.

낙찰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오는 12월까지 계약예규 등 하위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의 주요 일정

- ▶기재부, 5077억원 규모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 4건 추진
- ▶공정위,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
- ▶2015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기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하게 된다.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 낙찰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초래해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공사분야의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기재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일몰시한을 오는 2017년 말까지 연장하고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을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원칙적으로 소기업·소

상공인과 체결하도록 했다.

현재 혁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해야 한다.

당초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일몰시한을 2년간 연장해 철회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중소·지역업체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